

Thematic Radar

Ep. 31 완성을 향해가는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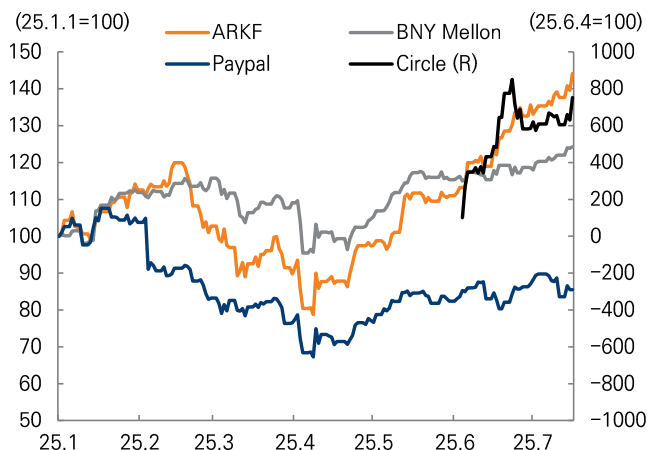
- 지난 16일 하원에서 크립토 패키지 법안 절차 표결 타결. 해당 법안들의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- GENIUS Act가 통과될 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수탁사, 결제 네트워크 업종에 수혜 기대
- CLARITY Act가 통과될 시 코인 거래소, 채굴 산업 및 ETF 발행사 등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

16일 미국 하원은 주요 가상자산 입법안 3건(GENIUS Act, CLARITY Act, Anti-CBDC Surveillance State Act)에 대해서 절차 표결(procedural vote)을 가결시켰다. 절차 표결이란 본회의에서 법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토론·표결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사전 단계이다. 지난 15일 절차 표결이 부결된 것은 3안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자는 패키지 투표(package vote)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탓이다. 하지만 부결 직후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해당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의 하원의원 중 11명과 함께 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개적인 압박과 공화당 지도부의 당내 조율에 따라 분위기가 급변하며 가결로 전환됐다.

절차 표결 가결로 세 법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. 본회의 투표 방식은 패키지 통과 시 3안 모두 승인, 부결 시 전체가 무산된다. GENIUS Act는 지난 6월 이미 상원에서 통가를 마쳤으며 하원 통과 시 바로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. 나머지 두 법안은 아직 상원 통과 전이라 하원 통과된 후에도 법적 시행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. 현재 폴리마켓에 반영된 GENIUS Act와 CLARITY Act의 최종 통과 확률은 각각 96%, 61%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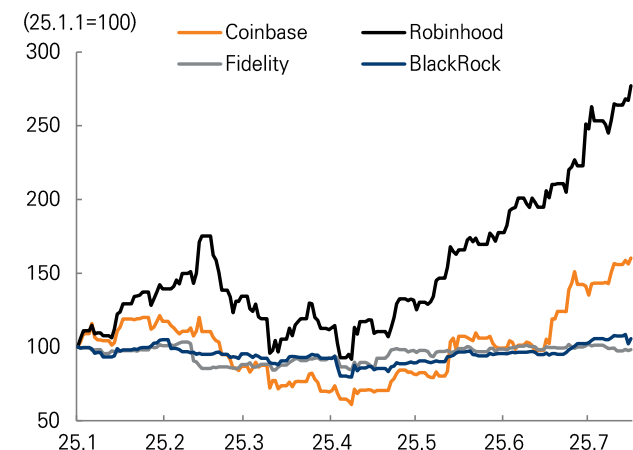
GENIUS Act를 비롯한 가상자산 법안들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, 디지털 산업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 수혜 분야는 다양하고 법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.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틀인 GENIUS Act가 최종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. 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(Circle), 수탁(커스터디) 기업(BNY Mellon), 결제 네트워크(Paypal)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.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CLARITY Act가 통과될 시 법적 지위가 모호하던 암호화폐 거래소/플랫폼(Coinbase, Robinhood)에 긍정적이며 채굴 산업 및 전통 금융기관과 ETF 발행사(Fidelity, BlackRock)들에도 긍정적이다. CBDC 생성을 금지하는 Anti-CBDC Act는 민간 주도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촉구할 전망이다. 한편, 이러한 기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ARKF(ARK Fintech Innovation) ETF로의 접근도 유효하다.

그림 1. GENIUS Act 관련 기업 및 ETF

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CLARITY Act 관련 기업

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